

## ■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 다음 주로 다가 온 COP6(6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각 국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있음

### <최근 미국 동향>

-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인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 또한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해 매우 회의적임
  - 인도와 중국과 같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 쿼터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美 경제에 격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 차기 대통령 후보인 Bush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토의정서의 인준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면 Al Gore 후보는 의회가 지난 1998년 클린턴 정부가 사인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美 DOE<sup>4)</sup>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0.8%(1998년 1,818 MMTCe<sup>5)</sup>, 1999년 1,833MMTCe)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1.3%(1998년 1,507MMTCe, 1999년 1,527MMTCe)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83%이며, 또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 98%가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하므로 온실가스의 감축은 결국 화석연료의 억제를 의미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배출은 2.9%가 증가한 반면, 산업과 가정부분의 증가율은 1% 미만임
- 그린피스는 특히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4) The Department of Energy

5) Million Metric Tons of Carbon Equivalent

라는 교토의정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함

#### <최근 EU 동향>

- EU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다양함
  - EU 의회는 신축성체제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이산화탄소 흡수원에 대한 분명한 제한선을 요구하고 있음<sup>6)</sup>
  - 그러나, EU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흡수원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
- WWF<sup>7)</sup>의 지원을 받는 유럽환경연합<sup>8)</sup>은 15개 EU 회원국들에게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함
  - 이들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주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원자력과 탄소 흡수원의 도입보다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보다 많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주장함(표 1)
- WWF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건물과 운송수단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청정화, 에너지세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등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sup>9)</sup>
- 11월 1일 발표된 기후변화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생활 및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북부보다는 남부 유럽에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함
  - 고온으로 인해 2050년경에는 그리스의 여름휴가 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현재 유럽의 최대 과일과 야채 공급 국가 중에 하나인 스페인 지역의 사막화가 예상됨
  - 북부 유럽은 습윤한 겨울로 인한 잦은 홍수가 예상되나, 기온의 상승으로 농업생산성의 증가, 에너지 사용 감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함

#### ○ 한편, 세계적인 7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 PC

6) 2000년 10월 30일자, 에코브리프 26호, 'EU, 기후변화협약 제 6차 당사국총회 대비 논의 활발' 참조

7) World Wide Fund for Nature

8) A coalition of European environmental groups and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industries

9) 2000년 10월 30일, 에코브리프 26호, 'EU, 기후변화협약 제 6차 당사국총회 대비 논의 활발' 참조

A10)를 구성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은 점점 더 활발해 지고 있음

- PCA에는 에너지, 화학 그리고 생활용품 산업의 주요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음
  - 세계 2, 3위 석유회사 Royal Dutch/Shell과 BP Amoco,
  - 세계 2, 3위 알루미늄 제조사 Canadian Alcan과 French Pechiney,
  - 세계 1위의 화학회사 Dupont,
  - 북미 최대 전력회사 중에 하나인 Ontario Power Generation사 등임
- PCA는 COP6에서 교토의정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천명함
  - 참여 기업들의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보면, 2010년까지 연간 9천만 metric tons의 이산화탄소 감축량과 맞먹을 것으로 계산됨<sup>10)</sup>
  - 각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공정하게 측정 보고하며,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검증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고용할 것에 동의함
  - 또한, 참여 회사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도 (market-based mechanism) 또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함

○ COP6의 주요 이슈로 예상되는 의무이행체제, 청정생산개발체제 특히 흡수원 등 사안별로 국가 간 대립이 예상되고, 선진국의 요구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은 확실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美 대선과 COP6의 결과를 예의 주시해야하며, 앞으로 닥쳐올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대비해 우리의 향후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산업계에서는 각 부문별로 형성되고 있는 환경무역 장벽과 자발적 감축 노력을 예의 주시해야하며, 또한 이에 적극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함
  - 자동차의 경우 EU에서는 새로 생산되는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

10) the Partnership for Climate Action

11) PCA의 199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6천만 metric tons 이었으며, 이는 선진국들 중 15위에 해당하는 양임

발적으로 2008년까지 140 gCO<sub>2</sub>/km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까지 이 기준에 따르기로 함

- 건설 업계의 경우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문제가 향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반도체협회는 PFCs의 소비량을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2010년까지 1995년 기준 10%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표 1> EU 환경연합의 요구 정책과 2010년까지의 CO<sub>2</sub> 예상 감축량

정 책	2010년까지 CO <sub>2</sub> 감축량 (백만 톤)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EU 지침에 국가별 재생가능에너지 적용 목표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에너지와 운송 부문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	200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현 건물의 개보수와 건물 신축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유도하기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국가적 규정을 요구하는 EU의 새로운 지침 제정	300
전자제품에 에너지 라벨링과 같은 표준효율제 도입을 통해 청정기술을 확산시킴	90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두 배로 늘려 18%에 이르도록 하는 규정 신설	150
발전소에 대해 20년 이상 가동하고, 효율이 45% 이하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0 g/kWh 이상이면, 가동을 중지하는 새로운 규정 도입	100
중공업 분야에서는 해마다 에너지 효율을 2%씩 상승시키도록 하는 EU 차원의 청정기술 벤치마킹 실시	100
대중교통과 대체연료에 대한 투자확대 그리고 EU의 운송 시장에 주행 거리에 따른 세금부과와 도심 도로 이용료 부과 등을 포함하는 환경부담금 제도의 도입	100~200

천정용 (cildon@hanmir.com, 02-3669-4099)